

朴정부 '10+α' 광주·전남 낙후 심화 우려

(중추도시권 육성)

인구로 권역 결정... 상대적 불이익 불보듯 MB정부 '5+2 광역경제권' 재판될 수도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전략 인 쇄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 하는 '10+α' 중추 도시권 육성 전략이 오히려 광주·전남의 낙후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호남 소외 정책인 '5+2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10+α' 사업도 광주·전남의 약점으로 꼽히는 인구에 따라 지원 권역을 구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20 개의 지방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12월까지 세부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10+α' 안을 보면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구가 밀집된 지역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주·전남의 소외가 우려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전국 인구 대비 구성비율은 각각 2.9%(148만3708명), 3.7%(195만6822명)로 두 지역을 합해도 6.6%에 불과하다. 반면 부산 6.9%, 대구 4.9%, 경북 5.3%, 경남 6.5%를 비롯한 대전을 포함한 중·남부지역도 10.1%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때도 지역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인구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전북 포함),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 경제권 등 '5+2 광역경제권'을 만들었고, 결

국 영남은 2개권역을, 호남은 1개역만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호남과 영남의 지원에 산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정부지원 대형 프로젝트도 호남은 8개, 영남은 16개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10+α' 계획도 '5+2 광역경제권'처럼 인구에 따라 사

업권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광주·전남은 최대 20개 중 3개 권역만 배정받는데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나주권과 광양만권, 목포권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도시권 예외지역인 완도와 신안 등 섬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장흥·강진 등 도시권 제외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5+2정책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10+α가 되면 특히 전남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인구밀집지역 많은 영남권은 물론이고, 그동안 호남과 함께 낙후 지역으로 분류됐던 충청권도 '10+α'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대전시와 세종시에 이어 내년 통합예정인 인구 100만명 규모의 충북 청주·청원 통합시 등이 합하게 되면 제 2의 수도권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도시 단위로 형성중인 충청권 개발이 중추도시권 육성이 목표인 '10+α' 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확대 팽창중인 충청권

역이 전주 등 전북권을 사실상 생활권으로 흡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광주권까지도 빨아들이는 '도시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남대 나주몽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전북은 이미 제 2의 수도권인 충청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충청권에 밀리게 된다"며 "10+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역간 격차를 고착시키고 국토 불균형을 초래해 광주·전남은 고립화에 이어 흡수 통합이라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지방 죽이기 신호탄" 비수도권 반발

국무회의 상정은 잠정보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수도권 일부지역 내 공장 신·증설과 대학이전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광주일보 26일자 1면)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전남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30일로 예정됐던 관련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으나, 완전 폐기는 아니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영종도내 일부 지역 등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단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현재 경기도

복과 투자유치를 구실로 수도권의 기업활동 규제를 풀기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非)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건의문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의 반대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수도권 내 공장종규제 완화로 지방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출범 두달 만에 지난 정부의 수도권 편향 정책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에서 30일로 예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보류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방문 환영합니다"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201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실사단이 29일 광주공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과 함께 꽃다발을 든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실사단은 30일까지 남부대학교 등을 방문해 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활동을 벌인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현지실사

광주시 프리젠테이션... 실사단 오늘 남부대 등 방문

2013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광주 현지실사가 29일부터 이를 일일적으로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코넬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과 피터 홀, 마크 카노 안토네이즈, 소이치

다카하시 위윈 등 실사단 5명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비행기를 이용해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가 예정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실사단은 광주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마친 뒤

U대회조직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동해 프리젠테이션(PT)을 가졌다.

광주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PT에서 3D 영상을 활용한 경기장 시설 소개를 비롯한 예산, 마케팅, 숙박, 입국 및 세관절차, 각종 법적 부분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실사단은 질의 등을 통해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단은 PT 이후 영주수영장에서

진행중인 제 85회 동아수영대회 개최식과 경기를 참관했다. 이날 마지막 공식 행사인 만찬에서는 광주지역 유소년 수영선수의 세계수영선수권유치 희망편지가 낭독되기도 했다.

한편, 실사단은 일정 둘째날인 30일 수영대회 메인경기장이 들어설 남부대와 오픈워터 경기장인 나주호 등을 점검한 뒤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박인비 시즌 3승 ▶15면

손연재 첫 은메달 ▶14면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region.go.kr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지역민의 어려움, 지역발전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지역이 웃어야 나라가 웃습니다.
- 주민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주민행복 증진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